

동경전력과 일본의 전력제도 개혁(2)

동경전력의 경영개혁은 사실상 일본정부의 전력제도 개혁으로서 발전과 송배전을 동시에 운영으로 경쟁기능이 작용되기 어려운 현행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조치임.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인 국유화나 다름없어 동경전력의 구제로 이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전력요금 인상, 배상, 원전의 폐로 작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 미비 등으로 자칫 도중하차 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음.

□ 전력제도 개혁의 시도

- 동경전력의 경영형태 개혁은 일본정부가 전력제도개혁을 사실상 선행시키는 것으로서, 발전과 송배전을 일체적으로 운영으로 인해 경쟁기능이 작용되기 어려운 현행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조치임.
- 일본정부는 전력회사의 고비용 경영구조를 개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를 구축한다는 구상인데, 실질적으로 국유화를 위한 환경정비라고도 볼 수 있음.
- 일본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력제도개혁의 핵심은 기존 전력회사가 발전·송전의 일체적 운영만이 아니고 소매도 거의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임.
 - 「발전」, 「송배전」, 「소매」 등 사업별로 면허도입 검토. 신규 진입과 경쟁 촉진이 목적으로 내년 전기사업법 개정을 겨냥하고 있음.

- 화력발전사업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동경전력의 개혁방향성은 이러한 큰 제도개혁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고 있음. 특히 동경전력의 실질적인 국유화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정부 및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는 동경전력의 고비용 체질을 바꾸고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의 상승을 억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동경전력 개혁의 방향과 과제

재정강화	▽ 1조엔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은 2/3이상의 의결권 획득을 목표
	- 동경전력은 경영권 장악에 난색
	▽ 거래금융기관이 1조엔 규모의 추가 용자
	- 은행은 채무보증 등 용자리스크 경감을 주장
	- 동 기구는 보증없이 은행에도 일정부분 책임 요구
수익개선	▽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 계획기본안은 최대 10%의 요금인상을 상정
	- 소비자가 반발, 경산대신은 인가에 엄격한 잣대 적용
	▽ 가와시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
	- 계획기본안은 2013년부터 재가동 상정
	- 지방자치체의 동의를 포함한 여론이 장해물
경영쇄신	▽ 위원회설치회사에 이행 등 경영쇄신
	- 현 경영진의 교체범위에 관한 논의
경영계획	▽경영형태 개혁
	- 사내company제, 외부자금 도입촉진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

□ 폐쇄적인 지역 독점형· 고비용 경영에서 탈피해야

- 현재 지역을 독점하고 있는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전기사업 관련 모든 것을 담당, 더욱 기자재의 조달처는 계열기업이 중심인 폐쇄적인 경영을 하고 있음.

- 일본정부 및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는 고비용 경영을 초래하는 「자기부담주의」로부터 전환을 중시하고 있음. 일례로 동경전력이 발주하는 스마트미터(차세대전력계)를 국내외 기업들에게 입찰을 기회를 주는 것도 동일한 맥락임.
- 동 기구와 동경전력이 3월말 완료하는 종합특별사업계획에서는 공적자금을 사용한 자본투입에 결론을 도출하는데 더하여,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등 수익개선 및 동경전력 경영개혁의 미래상을 일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적시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중장기적으로 요금상승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에 대해 원자력발전 정지에 따른 연료부담 증가가 주된 원인이나 동경전력의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발전효율이 높은 신형으로 바꿀 경우,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폐로비용으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질지도 모르는 현 상황에서는 동경전력이 자기부담으로 설비투자자금을 확보 하기는 어려움.

□ 도중하차식의 개혁 가능성 경계해야

- 화력발전이라고 하는 핵심 사업에 대해서도 자기부담주의를 버리고 외부자금을 도입하기 쉽게 하지 않으면 그 주름살이 모두 요금인상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됨. 화력발전을 어디까지 분리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 또한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나 도중하차 개혁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 소비자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게 됨.

□ 실질적인 국유화

- 실질적으로 국유화를 위한 환경정비라는 측면도 있음. 일본정부, 기구는 1조엔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여당은 법적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사업별로 분할·해체해야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음.
- 실질적인 국유화는 동경전력의 구제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있으나, 법적 정리를 하게 되면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사고 피해자 배상채권은 감액될지도 모름. 배상이나 원전의 폐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전력제도 개혁도 고려한 신생 동경전력의 모습을 어떻게 그럴 것인가 하는 난제 등에 대한 해답을 종합계획에서 마련해야 함.

<참고자료>

일본경제신문 2012.1.23~1.27